

01. ⑤ 02. ③ 03. ② 04. ① 05. ④ 06. ② 07. ④ 08. ② 09. ② 10. ④
 11. ② 12. ③ 13. ③ 14. ⑤ 15. ④ 16. ③ 17. ④ 18. ② 19. ④ 20. ①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A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B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⑤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모두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통치 기구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층간 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 회의에서 자치 규약을 만드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지 않는다.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가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를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하여, 국가만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집단으로 보아 정치를 국가만의 활동으로 이해한다.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A는 자유 민주주의, B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③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복지 국가의 원리가 구체화되는 헌법 조항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문화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강조된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국가의 경제 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⑤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3.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독재가 가능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는 모두 법률을 통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자 한다. 따라서 채점 결과가 2점이 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유형 중 A는 실질적 법치주의, B는 형식적 법치주의여야 한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형식 준수만을

강조한다.

-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하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법적 근거를 강조한다.'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4. 기본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사례에서 갑, 을, 병이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 유형은 평등권이다.

- ①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②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 ③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 ④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5.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국회 의장, B는 국무총리, C는 대통령, D는 감사원장이다. ④ 국무총리, 감사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법률안 재의 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 ②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 회의에서 의장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 ③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지 않는다.
- ⑤ 국가 긴급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6.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행정부 수반과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정부 형태와 다르다는 점에서 (가)는 대통령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원수가 실질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 정부 형태와 다르다는 점에서 (나)는 의원 내각제이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통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제에서 법률안 제출권은 의회만 갖고 있다.

- ③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④ t시기에 국가 원수 소속 정당인 A당은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갑국의 국가 원수는 자신이 속한 A당 인사를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할 것이다. t+1시기에 국가 원수 소속 정당인 A당은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갑국의 국가 원수는 의회 다수당인 B당 인사를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할 것이다. 따라서 t+1시기에 국가 원수 소속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 ⑤ t시기는 국가 원수 소속 정당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같다. 따라서 국가 원수

는 의회 다수의 지지를 얻어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

7.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중 A는 지방 의회, B는 지방 자치 단체장이다. ④ 지방 자치 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 의회에 제출하면 지방 의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주민 조례 발안 제도 개선과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권 신설 모두 주민 자치를 강화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② 지방 자치 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 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 의회가 조례안을 주민 투표에 부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 간에는 수평적 권력 분립이 나타난다.

⑤ 지방 자치 단체장 및 지방 의회 비례 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방 의회 의원은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다.

8. 헌법 재판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A는 헌법 재판소, (가)는 위헌 법률 심판, (나)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② 위헌 법률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재판 당사자의 제청 신청에 따라 헌법 재판소에 제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재판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담당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을 때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③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 재판소에 침해 여부의 판단을 청구하면 헌법 재판소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④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재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⑤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9.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정치 참여 집단 중 A는 정당, B는 이익 집단, C는 시민 단체, D는 언론이다. ② 이익 집단은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을 통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정당은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지 않는다.

③ 시민 단체와 달리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④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한다.

⑤ 정당은 여론을 형성하여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10. 정치 참여 방법 이해

정답 해설 : ㉠은 선거를 통한 개별적 정치 참여, ㉡은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치 참여, ㉢은 시민 단체를 통한 집단적 정치 참여, ㉣은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치 참여이다. 나.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치 참여는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시켜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르. 시민 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는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와 달리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가. 선거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의제를 운영하는 방법이다.

다.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치 참여는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이다.

11. 혼인, 이혼, 친자 관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② 협의상 이혼의 경우 부부는 이혼 사유에 상관없이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부부는 협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는 갑과 을의 혼인 신고 후 태어났으므로 혼인 중의 출생자이고, 갑과 을의 이혼 후에도 A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다.

③ 면접 교섭권은 이혼 시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④ A가 친양자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A의 친생 부모인 갑과 A 사이의 친자 관계는 유지된다.

⑤ 친양자 아닌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12.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 이를 수정·보완한 (나)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③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②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④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근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과점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다.

13. 형사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③ 기소 이후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구속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사유를 판단한다.

- ②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④ 갑에게 유죄인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갑에게는 형사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란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4. 형사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⑤ 징역이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가두어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될 수 없다.

- ② 을은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을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병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④ 1심 법원은 갑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에 해당되어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15.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정답 해설 : ㄴ.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및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이 배제된다. ㄷ. 불법 도박 용도의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그 용도를 알면서도 체결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그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미성년자가 용돈으로 참고서를 구입하는 계약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ㄷ.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16. 선거 결과 분석

정답 해설 :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선거 정당별 의석수>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지역구 의석수	1석	2석	2석	1석	0석
비례 대표 의석수	2석	4석	0석	2석	1석
총 의석수	3석	6석	2석	3석	1석

<개편안 적용 시 지역구 의원 의석수>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선거구 1-2	A당에서 2명 당선될 경우	2석	0석	0석	0석	0석
	A당에서 1명 당선될 경우	1석	1석	0석	0석	0석
선거구 3-4		1석	0석	1석	0석	0석

선거구 5-6	C당에서 2명 당선될 경우	0석	0석	2석	0석	0석
	C당에서 1명 당선될 경우	0석	1석	1석	0석	0석

<A당과 C당이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최소 의석을 확보하였을 경우>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총의석수 할당 결과	3석	6석	1석	3석	2석
지역구 의석수	2석	2석	2석	0석	0석
비례 대표 의석수	1석	4석	0석	3석	2석
총 의석수	3석	6석	2석 (1석초과)	3석	2석

<A당과 C당이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최대 의석을 확보하였을 경우>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총의석수 할당 결과	3석	6석	1석	3석	2석
지역구 의석수	3석	0석	3석	0석	0석
비례 대표 의석수	0석	6석	0석	3석	2석
총 의석수	3석	6석	3석 (2석초과)	3석	2석

③ 개편안 적용 시 C당의 경우 5-6선거구에서 최소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1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하여 총 2석을 획득하고, 최대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2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하여 총 3석을 획득하게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현행 선거 제도에서 A당의 총의석률은 20%로 A당이 획득한 정당 투표 득표율인 20%와 같다.

② 현행 선거 제도에서 D당이 획득한 비례 대표 의석수는 2석으로 지역구 의석수 1석보다 더 많다.

④ 개편안 적용 시 B당이 최대 의석수(2석)를 확보하여도 B당에 할당된 의석수(6석)보다 적으므로 B당의 초과 의석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A당의 경우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총 3석을 획득한다. 개편안 적용 시 1-2 선거구에서 최대·최소 의석을 확보하여도 총의석수는 3석이므로 선거 제도 개편에 따른 유불리는 없다. 반면 E당의 경우 현행 선거 제도에서는 총 1석을 획득하지만 개편안 적용 시 총 2석을 획득하므로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17.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국제 사법 재판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총회이다. ④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은 표결 시 주권 평등의 원칙을 반영하여 1국가 당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조약은 국가 간에 주로 체결되지만 국가 외에 국제기구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사건은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

⑤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총회에서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18. 불법 행위 이해

정답 해설 : ㄱ. (가)에서 과실 책임의 원칙상 갑은 주택 파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을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다)에서 책임 무능력자의 행위가 책임 무능력 이외의 사유, 예를 들어 정당방위·긴급 피난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불법 행위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나)에서 갑의 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하지만 갑의 행위는 업무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을의 사용자 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ㄹ. (라)에서 갑의 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하고, 을은 병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정답 해설 :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 갑은 현실주의적 관점, 을은 자유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다. ④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현실주의적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② 자유주의적 관점은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에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중시한다.

③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 안보 추구하고 전쟁 억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⑤ 자유주의적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국가가 도덕적 규범에 따라 외교정책을 수립한다고 본다.

20. 근로자의 권리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18세, 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 병은 19세 이상의 성년이다. ㄱ. 연소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장 근로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연소자인 을의 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것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다. ㄴ.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근로 기준법상 갑과 병이 연장 근로에 합의한다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다.

ㄹ.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년인 병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병이 부모의 동의 없이 정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병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